



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

최 원 선임연구원

요약

■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도 존재함. 최근 우리나라도 지니계수 악화, 상대적 빈곤율 상승, 중위소득자 감소 등 소득불평등 지표가 나빠지고 있음. 소득불평등 심화는 중산층 약화와 빈곤층 확대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■ 소득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빈부격차 해소 및 중산층 육성은 매우 중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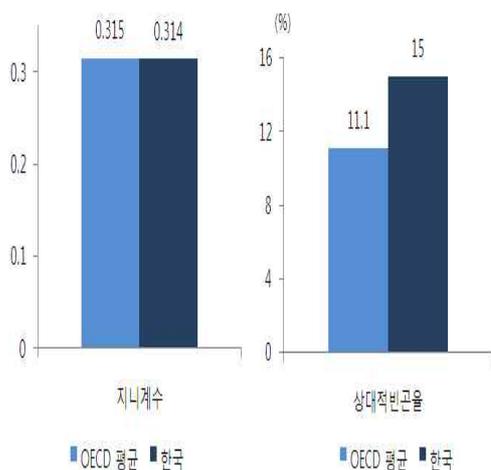
- 자본주의가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‘승자독식’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의 주범이 될 수 있음.
 - ‘반(反)월가 시위(Occupy Wall Street)’ 등과 같은 기존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소득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.
-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조, 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, 조세제도 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음.

■ 우리나라의 경우 지니계수¹⁾가 OECD 평균 수준이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.

1) 지니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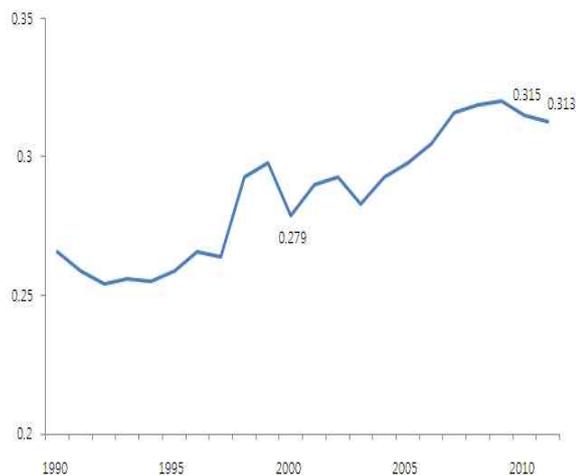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.315로 OECD 평균인 0.314와 유사한 수준이나 상대적 빈곤율은 15%로 OECD 평균인 11.1%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.²⁾
- 한편, 우리나라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
〈그림 1〉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비교



자료: OECD.

〈그림 2〉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근로자 지니계수



자료: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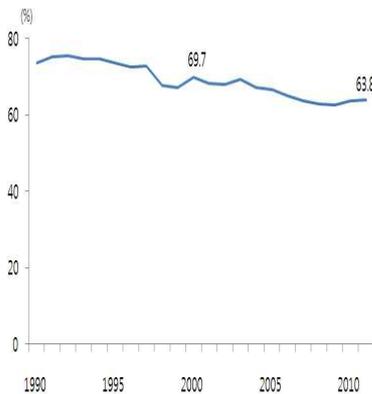
■ 특히,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.

- 중위소득 50%에서 150% 미만의 소위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9.7%에서 2011년 63.8%로 줄어든 반면, 동 기간 중위소득 50% 미만의 빈곤층 비중은 10.4%에서 15%로 급증함.
- 소득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상위 20%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%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분배율의 경우도 2000년 4.4배에서 2011년 6배로 상승함.
-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 및 인적자본, 경제개방 확대, 정부의 복지정책, 직업 안정성, 자본소득 비중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의 확대와 자산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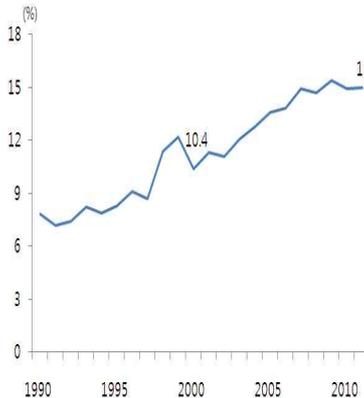
2)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% 미만 비율을 의미함.

3) 조운제, 박창귀, 강종구(2012), 『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』, 한국은행을 참조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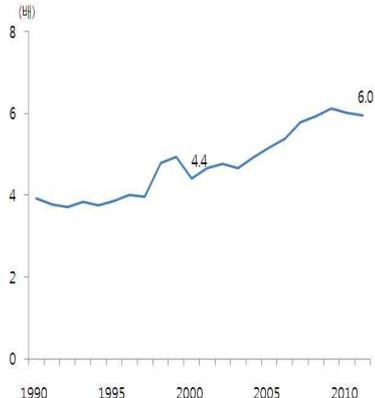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중산층 비중 추이



〈그림 4〉 빈곤층 비중 추이



〈그림 5〉 5분위 분배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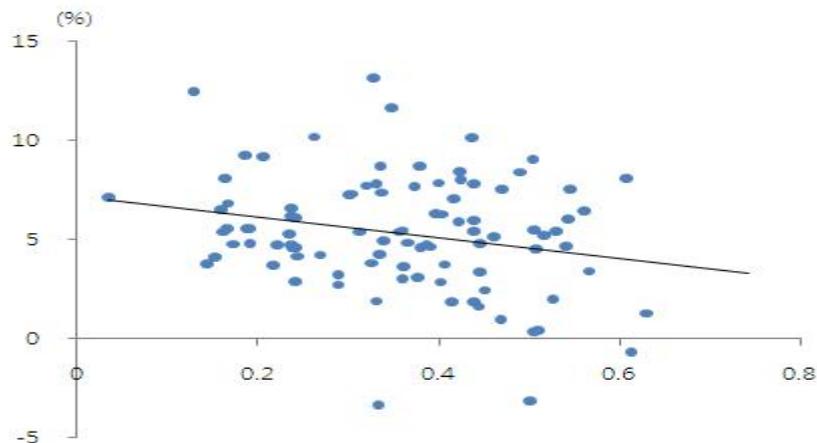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.

■ 소득불평등 심화는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, 경제·사회적 불안, 경제시스템 불안정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, 대체로 지니계수가 높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국가일수록 장기 경제성장률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
● 〈그림 6〉과 같이 95개 국가의 지니계수와 장기 경제성장률 사이의 산포도가 이들 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음.⁴⁾

〈그림 6〉 지니계수와 장기 경제성장률 간의 산포도



주: 1) 가로축은 지니계수를 의미하며, The World Bank와 손종철(2010)의 1990년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음.

2) 세로축은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며, The World Bank의 1990~2005년 1인당 GDP 증가율을 사용하였음.

자료: The World Bank, 손종철(2010).

4) Alesina and Rodrik(1994), Persson and Tabellini(1994), Perotti(1996), Galor(2011) 등의 연구가 있으며, 본고에서는 손종철(2010. 3), 「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」, 『금융경제연구』의 내용을 참조 및 활용하여 분석하였음.

- 특히, 일부 남미 국가들(브라질, 칠레, 아르헨티나)의 경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높은 지니계수(0.5)를 나타낸 후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며, 이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.

■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지원 등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-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계층의 빈곤화를 막고,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건전성 관리를 통하여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빈곤층 확대를 방지함.
- 빈곤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함.
-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나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되지 않도록 감시 장치 마련도 필요함.
 - 우리나라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 1,981달러로 OECD 평균의 30% 수준에 불과하며,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비도 7.6%로 OECD 평균(19.2%)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.⁵⁾

■ 한편,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정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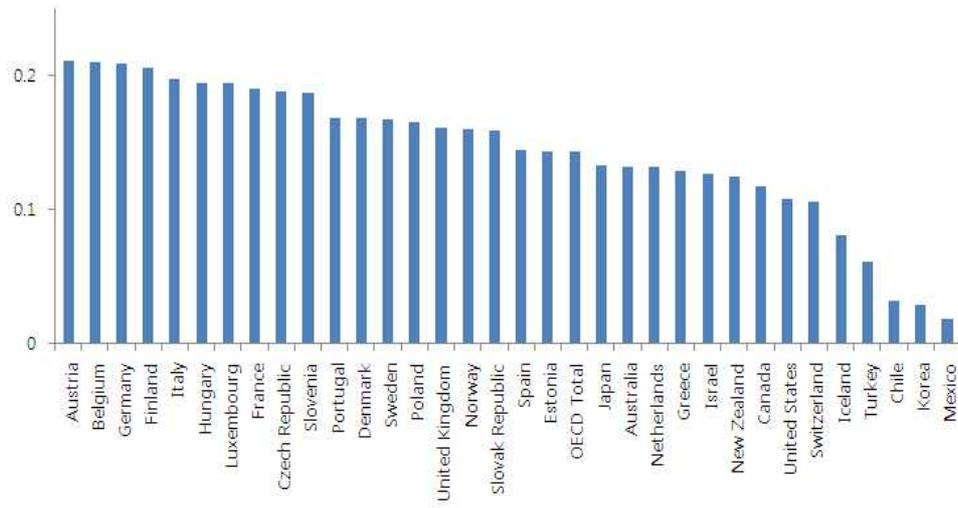
- OECD 회원국들의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니계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회원국들의 지니계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지니계수 상승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님.
- 그러나 OECD 회원국들의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33개국 중 31위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⁶⁾
-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회보장지출이 낮고 조세구조에 있어서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도 낮기 때문임.⁷⁾
- 따라서 경제상황과 소득계층 구조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소득세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 **kiri**

5) OECD의 Social Expenditure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함.

6) 아일랜드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음.

7) 조윤제, 박창귀, 강종구(2012)를 참조함.

〈그림 7〉 OECD 회원국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변화



자료: OECD.